한·미 FTA로 인한 피해대책수립 건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2년 1월 일
발 의 자 : 이성재 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이 앞 다투어 FTA체결로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칠레를 비롯한 싱가포르, 아세안, EU,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여 2차 산업의 경쟁력은 확보하였으나 농업을 경제기반으로 삼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는 경제기반이 무너질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 오렌지 수입이 참외의 성출하기와 겹침으로 참외를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
○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보온덮개, 하우스 파이프 교체 등 시설개선 자금 국도비 보조 부담비율 상향조정
○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관리시설 및 인증획득 지원
○ 축산 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 확대
○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대형선별장 건립 지원

3. 건의내용 : 별첨

4. 건의처 : 청와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성주군수

한·미 FTA로 인한 피해대책수립 건의안

인류문화가 형성된 이후 농업은 식량을 비롯한 인간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로 인간사회에 있어 농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농본주의 경제정책인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기치아래 모든 경제활동이 인간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에 식(食:먹거리)에 해당되는 농·수·축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였으나,

19세기 초에 석유라는 검은 진주가 발견됨에 따라 2차 산업인 경공업의 시작으로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의 발달로 이어져 점차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 경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1970년대 초반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2차 산업에 매진하여 왔으며, 근래 세계 경제 질서에도 발 빠르게 대응코자 각 국가와 활발한 FTA 체결 등으로 2011년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진입함과 아울러 세계 7대 무역국으로 발돋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면을 보면 농·축산업은 젊은 층의 이농현상, 경기침체,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과 맞물러 우리 농촌의 경제는 이중 삼중의 악재가 겹쳐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라, 이번 한·미 FTA 발효로 인한 피해액이 주 생산품목인 참외를 비롯한 과수, 축산 등에서 연간 5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바, 농·축산업 분야는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에 처하게 되어 농·축산업의 경쟁력은 고사하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 자명한 사실임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좌절이 아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꽁꽁 언 땅에서 만물이 소생하듯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안겨 주고자 지역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간곡히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합니다.

첫째,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군 발전의 원동력인 참외 산업이 FTA 대책 수립 과정에서 피해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이는 오렌지 수입 시기와 참외의 성출하기가 겹쳐져 가격 폭락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참외를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반드시 포함시켜 농민의 시름과 아픔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주참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보온덮개, 하우스 파이프 교체 등 시설개선 자금을 국도비 보조 부담비율을 70% 이상 상향 조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농민의 경비부담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통기반 확충 및 2015년도 저농약 농산물 품질 인증제 폐지에 대비함과 아울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관리시설 및 인증획득을 지원 바랍니다.

넷째, 축산 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원 재원비율의 상향 조정과 이차보전방식보다도 보조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처 방안으로 대형선별장 건립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우리 농촌의 생존권 보장 차원과 지역 존립의 명운이 걸려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주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어려운 농업 환경에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어 한 줌의 불씨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 1. .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